

02

유튜브 제국의 네트워크 경제와 사이버 레커 정책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변호사·前 언론중재위원



총설

최근 ‘쯔양 사태’로 촉발된 사이버 레커 규제에 대한 공론화가 뜨겁다.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란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레커(wrecker·견인차)처럼 온라인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이나 게시글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YouTuber)를 말한다. 이들은 의혹제기, 추측이나 평가 등의 방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교묘하게 피하면서 유튜브(YouTube) 조회수를 올려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고 있다. 악플을 선동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사이버 레커는 유튜브가 언론중재 대상인 언론이 아니라는 점, 미국에 유튜브 본사가 있어 국내 플랫폼과는 달리 사법 공조가 쉽지 않아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현행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수익 창출 형태를 방조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Instagram) 같은 소셜미디어(SNS)들이 공범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이들을 방치하고, 자율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제에는 미온적이어서 사이버 레커 처벌을 위한 수익환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론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쯔양 사태’에서는 쯔양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전국진’이 신속하게 구속기소되고, 유튜브에서는 ‘카라쿨라 미디어’, ‘구제역’, ‘전국진 주작감별사’ 채널 세 곳을 유튜브 크리에이터(creator) 정책 위반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익창출 중단’ 조치를 했다. 또한 뒤이어 ‘뽕가’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조치한 유튜브의 모습은 방송통신위원회나 검찰, 국회 등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7월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직접 선정적, 폭력적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7월 15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유튜버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한 뒤 수익 창출을 위한 의도적 허위 콘텐츠 게시자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유튜버들이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 구속 수사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인에 의한 여러 건의 범죄는 병합 수사하고,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도록 했으며,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는 한편,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회에서도 박민규 의원실 주관으로 명예훼손으로 수익 사업화를 하는 사이버 레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법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고, 2024년 8월 29일 신동욱·

유튜브와 사이버 레커의 수익 창출 구조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정·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사이버 레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온라인상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3년 유튜브 CEO가 밝힌 매출은 2022년 기준 약 400억 달러(약 53조 원)에 달한다. 2024년에는 유료 구독을 통해 연간 1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작년 4분기에 전년 동기 79억 6000만 달러에서 92억 달러의 광고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져 있다. 유튜버들은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수익을 얻는데, 1)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 참여, 2) 광고수익, 3) 슈퍼챗 및 슈퍼스티커, 4)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 5) 멤버십 및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방식의 수익을 얻는다. 첫째, YPP는 유튜브 수익창출의 핵심으로 가입요건은 구독자 1,000명 이상, 최근 12개월간 총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준수, 애드센스 계정 연동을 조건으로 한다. 둘째, 광고 수익은 가장 일반적 수익창출 방식으로 1,000회 조회당 광고주가 지불하는 CPM(Cost Per Mile)과 클릭당 조회수로 광고주가 지불하는 CPC(Cost Per Click)로 나뉘는데 국가, 주제, 시청자 성향 등에 따라 금액이 CPM은 1달러에서 10달러 사이에서 변동한다. 셋째, 슈퍼챗 및 슈퍼스티커는 라이브 스트리밍 중 시청자들이 보내는 유료 메시지로 인한 수익을 얻으며 넷째,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의 시청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익이다. 과거 유튜브 레드라고 불렀던 유튜브 프리미엄은 개인이 월 13.99달러에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 중 55%를 해당 구독자가 시청하는 콘텐츠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유튜브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시청자(및 구독자)들, 즉 전체 이용자 유입이 많아지고, 조회 수가 많고 채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수익이 늘어난다. 유튜버들은 구독자 수가 많고 슈퍼챗 등의 수익을 주는 팬 층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고정 구독자들과 팬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이런 유튜브의 수익 모델을 악용해 사이버 레커 채널은 수익형 명예훼손 비즈니스의 형태로 진화되어 왔다. 사이버 레커는 온라인 상에서 사건을 알려 이슈 몰이로 채널 유입을 끌어들이고, 게시물에 악플 등으로 과격한 논쟁이 격화되는 것을 즐긴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비극이나 스캔들, 논쟁적 이슈를 확장시키는 수법으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촉발하고 이를 수익화시킨다. 사이버 레카들로 꼽히는 대표적 유튜버들은 'BJ 잼미'의 악플에 선동을 해 그를 자살

로 몰고간 채널 ‘뽕가’, 연예인 가짜뉴스를 퍼트리던 ‘탈덕 수용소’, 유튜브 슈퍼챗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가로세로연구소(일명 가세연)’나 ‘열린 공감TV’ 등 시사 뉴스 채널을 표방하는 채널들 역시 사이버 레커로 분류된다. 시사 뉴스 표방 유튜브 채널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지지하는 정치인에 따라 가까이 소문을 퍼트리고 험담을 생산하고 대상을 공격하면서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¹⁾ 이들의 주된 동기는 수익이다. 유튜버들은 라이브 방송 슈퍼챗(후원금)이나 협찬 등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익 중 플랫폼에서 배분받는 비중은 7%에 불과하고 70%가 협찬 수익이라고 한다.²⁾

유튜브 채널 ‘집에서 월 천 버는 쿠키’의 운영자 C씨의 사이버 레커 채널 운영 경험 고백기를 참조하면 사이버 레커의 수익 창출 형태가 잘 드러난다.³⁾ C씨는 논쟁적 이슈를 전달한 뒤 두루뭉술한 결론으로 시청자들의 참여나 의견 제시를 유도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보니 댓글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났고, 댓글이 많아질수록 C씨 채널에 시청자들의 체류시간도 길어져 단기간에 채널이 성장하고 수익이 늘어나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했다. C씨의 활동 당시 유튜브 광고 단가는 조회수 1,000건당 6,000원에서 1만원 수준으로 영상 제작에는 10~15분이면 충분하지만, 해당 영상이 10만회를 기록하면 6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한다.

‘BJ 잼미’의 대해 ‘메갈 논란’ 같은 제목을 달아 혐오를 부추기던 사이버 레커 ‘뽕가’의 수익을 유튜브 수익 분석 사이트 노스인플루언서(NoxInfluencer)로 분석한 결과, 2022년 약 12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뽕가’의 월수입은 9,100만 원에 달하며, 3달간의 슈퍼챗 액수만 326만 1,287원이었다.

최근 2024년 5월 14일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피의자는 유튜브채널을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여성 아이돌 그룹멤버 장원영, 인플루언서 등 총 7명을 상대로 허위영상을 23회 게시하고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외모 비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하여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Starship Entertainment)에 대

1) 손희정 (2022). 타인의 비극을 에너지로 삼는 사이버레커 시대. <신문과 방송> 3월호 No.615, pp.88-91.

2) 신형섭 (2024. 7. 19). 법적 사각지대서 돈벌이 매물[사이버레커 논란①]. <뉴스시스>. URL: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18_0002817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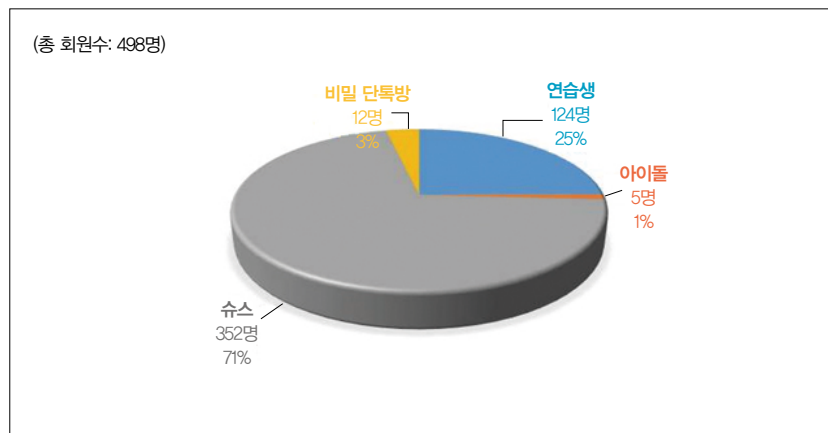
3) 박주환·변동휘·정인지 (2024. 9. 27). [디지털 신곡(神曲)②] 분노는 ‘돈’..양심 팽개친 지옥의 뱃사공 사이버레커. <투데이신문>. URL: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dxno=99663>

한 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직업적으로 가짜 이슈 생성,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높은 조회 수와 회원가입 등을 유도하고 단기간에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유도한 사이버 레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적시하였다. 위 공소사실에서 밝혀진 해당 유튜브 채널의 수익 구조와 범죄 수익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을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대형 소속사도 멤버십에 가입했다는 등으로 홍보하고, 영상 시작시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금전적 후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익구조를 만들었다.

유료회원제의 회원등급은 연습생(월 1,990원), 아이돌(월 4,990원), 슈스(월 12,000원), 스페셜(월 600,000원), 비밀 단독방(월 30,000원)으로 가입초기에는 할인(첫 달 멤버십요금 20% 할인)이 제공되어 10대 청소년도 월 1,900원으로 쉽게 유입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림 1〉 피고인 운영 유튜브 채널의 유료 회원 인원 및 비율(23. 4. 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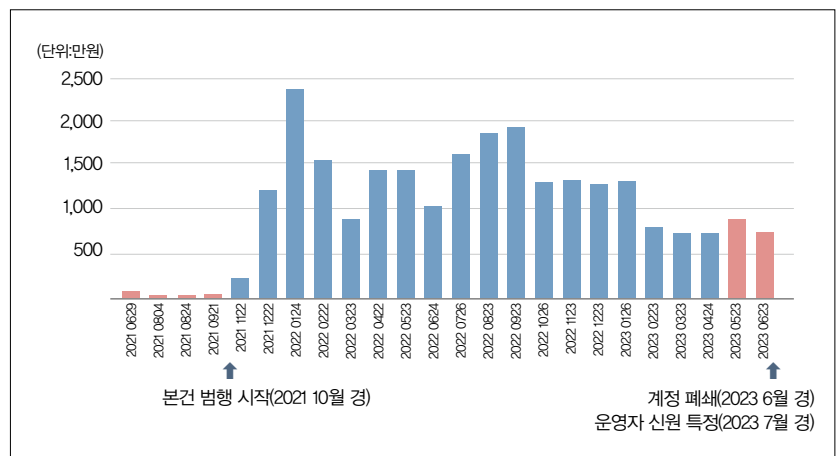
출처: 인천지방검찰청 (2024. 5. 14).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로 억대의 수익 취득한 유튜버 기소. <인천지검 보도자료>

검찰이 피고인의 유튜브 수익금계좌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간 합계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고(월 평균 1,000만 원)⁴⁾, 수익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사

4) 해당기간 근로자 월평균소득(평균 384만원)의 약 2.6배, 2022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3.7%, 유튜버, BJ등 유사직 중 소득 상위 10%에 해당함.

이버 레커 범죄로 특정된 범죄수익을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 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한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지금까지 악성 콘텐츠 유튜버의 재산이 몰수·추징보전된 사례는 위 ‘탈덕수용소’ 박모씨의 사례가 유일하다. 인천지검은 연예인을 상대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2억원 상당을 동결하였다.

〈그림 2〉 유튜브로부터 입금된 수익금 변동 추이



출처: 인천지방검찰청 (2024. 5. 14),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로 억대의 수익 취득한 유튜버 기소. 〈인천지검 보도자료〉

유튜브 정책과 크리에이터의 윤리 책임

한때 ‘Don’t Be Evil’이란 회사 모토를 걸었던 구글(Google)은 유튜브의 이런 행태를 방조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유튜브에서 탈법적인 유튜버에 수익을 제공하고 실버·골드버튼 등을 주는 것 자체가 금전적 수익을 우선하라는 암시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보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이들의 행태를 방조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2023년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의 92.6%가 ‘사이버 레커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요인으로 ‘콘텐츠 생산자의 비윤리성’을 꼽았다.

최근 ‘쓰양 사태’ 이후 이러한 사회적 비난을 인식한 유튜브는 신속하게 사이버 레커들에게 수익 창출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콜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되었다. 뒤이어 ‘뽕가’ 채널도 2024년 8월 29일부로 유튜브 수익 정지 조치

가 내려지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되었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는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유튜브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이나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튜브는 크리에이터의 권한 정지부터 계정 해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는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정책'에 따르면 유튜버 중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 하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 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익 창출 크리에이터라면 커뮤니티 가이드가 개별 동영상은 물론 채널 전반에도 적용되고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콘텐츠는 수익 창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유튜브에서 삭제된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에 대해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못하게 할 수 있고, 문제가 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고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유튜브의 채널 또는 계정 폐쇄 사유로는 1) 콘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악의적이거나 중요성을 조장하거나 인신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등), 2)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등), 3) 정책 위반(중요심 표현, 괴롭힘, 명의 도용 등)이 있다.

유튜브는 이런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필요가 있으나 그간 매우 미온적 태도를 취해 사회적 비난을 초래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공론화가 높아지자 유튜브가 자율규제를 취하고 있지만 그 한계는 뚜렷하다. 유튜브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실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 침해가 발생한 콘텐츠를 삭제·임시조치할 의무를 부과하지만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사이버 레커 또는 유튜버를 규제하는 법은 정보통신망법이 유일한데, 유튜브의 경우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본사가 미국이므로 가해한 유튜버의 신상을 파악할 목적으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하려면 미국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대기업이나 자산가가 아닌 이상 공격자가 누군 인지를 알아내는 것부터 어렵기 때문이다.

사이버 레커 등
허위조작 정보나
악성 콘텐츠에
대한 규제 입법과
그 한계

〈그림 3〉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해외 입법 및 정책 대응 사례

국가	법률제도명	내용 및 특이사항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 (D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이용자 이상 22개 플랫폼에 허위 정보 차단 의무 부과 • 유럽 각국에 감독·합의기구 설치
 독일	네트워크집행법 (NetzD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우 옹호, 소수자 혐오 등 방지하기 위해 신고 이후 일정 시간 내 위법 콘텐츠 삭제 의무 • DSA로 계승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 (Loi inf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허의 정보 게재 금지 • 실제 적용 사례 없음
 싱가포르	온라인허위 및 조작 방지법(POF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적 허위 실은 개인에 대해 플랫폼 통한 수정 지시, 불응시 처벌 • 위헌 소송에서 합헌 판결
 중국	청량(淸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사이버 유언비어' 통제 지침 • 더우인·빌리빌리 등 1인 미디어 방송인 콘텐츠 규제 및 계정 폐쇄

출처: 인현우 (2024. 8. 29). 멀쩡한 사람 '나락' 보내는 '가짜뉴스'.. 처벌수위 강화·플랫폼 규제 돌입하나. 〈한국일보〉.
URL: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814290004672>

독일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 보도시 24시간 내에 해당 보도 자료를 삭제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유로(약 7,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하는 법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으나 연방의회에서의 격렬한 토론 끝에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된 경우가 있었다. 다만, 이후 독일에서는 2017년 가짜뉴스(fake news)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소셜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이하 '네트워크법')을 제정해 2018년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범죄적 내용'을 발견하고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는 경우, 독일 내 이용자가 200만 명 이상인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같은 소셜 네트워크 회사에 적용되어 최고 500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였다. 불법 콘텐츠 중에서 특히 혐오 표현, 폭력, 범죄와 관련된 게시물을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도입 취지로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불법 게시물이라고 신고하면 소셜 네트워크 회사는 게시물을 24시간 내에 삭제하거나 독일 계정에서 차단해야 하는데, 불법 게시물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최대 벌금 5000만 유로(약 650억 8500만 원)가 부과되는 규제였다. 소셜 네트워크 회사는 6개월마다 법안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네트워크법에 따라 차단해야 하는 게시물 유형은 위법 행위 21개로 정해져 있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 테러 선동, 범죄단체의 모집, 신앙이나 종교집단에 대한 비방,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게시물 등이었다.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는 자신이 신고하는 게시물이 어떤 법령을 위반하는지 명시하도록 했다. 신고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게시물을 검토한 뒤, 그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에게 신고가 들어온 사실과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었다. 2018년 상반기에 페이스북은 1,704건을 신고 받아 게시물 362개를 삭제했고, 트위터는 신고된 26만 4,818건 중에서 게시물 2만 8,645개를 삭제했음⁵⁾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튜브가 공개하고 있는 독일 네트워크법 처리 내역을 보면 삭제나 차단하지 않은 내역이 83.3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튜브는 독일 네트워크법 처리와 관련 “명예훼손 및 모욕의 경우 소수의 사례만이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여 그 한계가 뚜렷했다. 나아가, 구글과 메타(Meta)는 이 법에 규정된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의무에 반발해 쾰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3월 아일랜드에 유럽연합(EU) 본사를 둔 구글과 메타는 독일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⁶⁾

프랑스는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 허위 정보 확산이 쟁점이 된 것을 계기로 가짜뉴스에 직접 대응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2018년 제정했는데, 선거 3개월 전부터 투표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정보를 게시하지 못하게 법원이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스페인은 언론매체와 소셜 네트워크의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장관령을 제정하고 초법적 상설 기구를 설립했다. 그런데, 정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허위 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언론인 협회나 시민사회 대표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허위 정보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판 받았다. 헝가리는 정부의 팬데믹 대응을 방해하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정부 대응에 관한 비판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2020년 3월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이 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는 개인이 아닌 미디어와 언론인에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언론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의견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구금되는 사례를 낳기도 해 우려를 낳았다.

5) 김민건 (2018. 10. 30). 가짜 뉴스 규제, 독일식이 해법?. <시사인> 580호. URL: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41>

6) 이세원 (2023. 5. 31). 가짜뉴스 대응법 도입한 유럽 국가...“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30531067800005> 한편, 독일 네트워크법은 2024년 2월 유럽연합(EU)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이 발표됨에 따라 폐기되었음.



그리스는 허위 정보의 개념을 확대하고 허위 정보 유포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2021년 11월 개정했는데, 이에 대해 국경없는기자회(RFS) 등은 언론인의 직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탈리아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대신 가짜뉴스 신고사이트를 개설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를 검열할 의무를 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제정했는데, 글로벌 플랫폼은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차별적 콘텐츠, 아동 학대, 테러 선전 등의 불법 유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제거해야 하며, 위반하면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반복해서 어기는 경우 EU 회원국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유럽 각국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규제의 실익과 근본적 가치의 위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사이버 레카의 근절을 위한 과제는?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은 사이버 레카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해 ‘온라인상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신동욱·조승환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정·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발의했다. 김장겸 의원 주관 국회토론회에서도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견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도 현행법은 과거 규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 서비스가 가짜뉴스 유통의 숙주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입법 보완을 예고했다. 이처럼 사이버 레카가 혐오 선동

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면서 돈벌이를 위해 타인을 인격 살인하는 것을 방치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물어 혐오 선동과 폭력의 스펙터클이 돈이 되는 메커니즘을 깨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⁷⁾ 방송통신위원회도 법정형 기준 상향이나 부당한 이익 몰수 추징에 대한 법이 발의되고 플랫폼 사업자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도 논의되는 상황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4년 8월 5일 민주당 정을호 의원실 주관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⁸⁾

우선, 사이버 레커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형량의 상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지만 하한은 정해놓지 않아 해당 법률을 근거로 처벌 시 1개월 징역 또는 5만원 벌금 등 가벼운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온라인 사이버 레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음은 수익환수조치에 대한 입법입니다. 2017년 8월부터 유튜브가 도입한 '노란 딱지' 정책을 통해 문제적 영상에 대한 수익 창출을 제한하지만 이는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차단하는 것이지 기존 수익을 막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나서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받은 후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이다.

플랫폼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해 입법하고 정부가 플랫폼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할 필요성을 개진한 주장도 있었다.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에는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신고받은 게시물에 대해 조치하여야 할 의무 규정이 없기에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신고를 받고, 신고받은 것에 대해 삭제, 이용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크다. 유튜브는 광고를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 레커 영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는 것이 그 주장의 요지이다.

이번 '탈덕수용소' 기소 사례는 사이버 레커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와 집

7) 오인해 (2024. 8. 19). "가짜뉴스 방치하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 책임 지워야". <법조신문>. URL: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325>

8) 조수민 (2024. 8. 5). 사이버레커가 피해 줄려면... '처벌 높이고 수익 몰수해야'. 정부 가이드라인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ZD넷코리아>. URL: <https://zdnet.co.kr/view/?no=20240805165503>

행 의지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이다. 검찰은 개별 피해자에 대한 단발성 모욕 등으로 송치되더라도 사이버 레커 활동을 직업적으로 계속해온 정황을 발견했을 때, 유튜브 채널의 수익금 계좌추적, 주거지 압수수색,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 포렌식 등 적극적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다수의 추가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무분별하게 허위 또는 왜곡된 영상 게시를 통해 2억 5천만원의 수익을 취득하여 본건이 가짜뉴스 유포를 통한 수익형 범죄임을 명확히 규명하였고,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여 엄단한 모범적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짜뉴스 확산을 막고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플랫폼들의 협조가 필수 요건이라 할 것이다. 🍵